

# 중국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만수 / LG경제연구원

최근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여러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경제 및 체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은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상당기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알리는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중국 경제의 취약성과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들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에 거는 기대가 클수록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이다.

## 미시적 취약성과 사회적 갈등

중국의 WTO 가입으로 앞으로 체제 전환과 관련되는 국가 위험(country risk)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중국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중국 위기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으로 대표되는 중국 경제의 미시적 차원의(micro level) 취약성이 중국에는 거시 경제 차원의(macro level)의 위기로 전화(轉化)할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거시 경제적으로는 별다른 위기 신호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의 부실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결국 엄청난 경제 위기로 이어진 바 있다.

중국도 아직까지는 매년 7%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등 탄탄한 거시적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유기업, 국유은행 등의 잠재적인(미

시적) 부실이 언젠가는 표면화되어 경제를 붕괴 지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위기론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작년 말 WTO 가입을 계기로 가속되고 있는 대외 개방의 충격을 비효율적인 중국 산업이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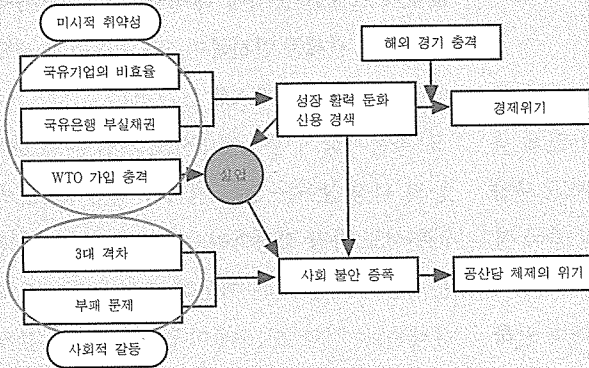
더불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동서간, 도농간, 계층간 격차 문제(이른바 3대 격차), 실업문제, 부패문제 등도 장기적으로 중국에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개혁개방 이후 이러한 문제들은 날로 확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지금까지는 고도성장의 성과에 가려 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고도 성장 추세가 멈칫거리게 되면 언제라도 한꺼번에 폭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이미 중국 공산당의 이념적인 권위가 상당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곧장 공산당 지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연결되고 결국 중국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림 1>

## 미시적 취약성은 거시적 위기로 전화할 것인가?

중국 국유기업과 은행이 심각한 비효율과 부실을 안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미시적 취약성은 과연 거시적 위기로 연결될 것인가?

〈그림 1〉 중국 위기론의 체계



가? 최근 중국 국유기업과 은행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러한 위험은 오히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우선 중국이 안고 있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지목되는 국유기업 부문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 90년대 후반까지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던 중국 국유기업은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진두 지휘 아래 국유기업 노동자의 40% 가까이가 감원되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최근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또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국유기업 부문의 절대적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자기업, 사영기업 등 비국유 부문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경제 전체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전체 산업 생산의 55%에서 2000년 29%로 빠르게 줄어들었다.〈그림2, 3〉

이처럼 국유기업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국유기업의 비율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국유기업 부문의 미시적 비효율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시 경제 전체의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비국유 부문의 성장과 지속적인 민영화로 향후 5년 내에 중국 국유기업의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국유기업 위기론은 어느새 '잊혀진' 문제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은행의 부실 채권 또한 총 여신의 25%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 역시 문제 누적 단계에서 문제 해결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9년 4대 국유은행

산하에 각각 한 개의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고 이들 은행의 부실채권 중 1995년 이전에 발생한 1조 3000억 위안 규모의 부실 채권을 인수시켰다. 계속 누적되어왔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특히 이 부실 채권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그것이 개혁 개방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고 부실화된 국유기업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비록 부실 채권의 규모가 매우 크기는 하지만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한 정부 책임 하의 점진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중국 정부는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기 책임과 엄격한 대출 기준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고 기존 은행의 조직을 과감히 줄이는 등 구조조정도 나서고 있다. 국유기업의 수익성 개선 자체도 미래의 부실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또한 이 부실채권은 주로 역사가 오래된 이른바 4대 국유 상업은행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외국과의 합자 등을 통해 10여 개의 은행이 설립되었다. 과거 체제 전환과정에서 쌓인 부실 채권이 없고 비교적 경영 효율성이 높은 이들 신규 은행들의 점유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금융 시스템

의 안정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전망이다.

WTO 가입의 충격?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개방의 충격으로 일부 산업이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중국에서도 사양화되고 있는 특정 산업 부분의 문제이지 중국 경제 전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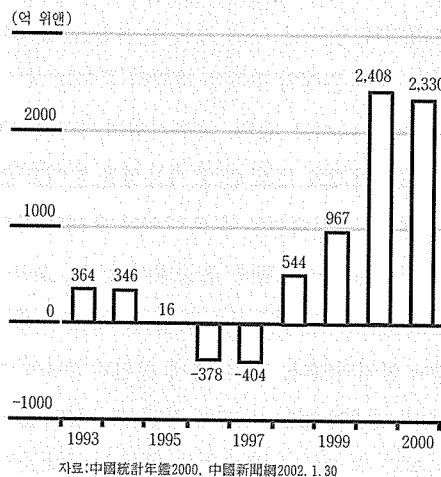
더욱이 중국이 WTO 가입 후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개방 등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중국은 나름대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들어 제품별 관세 인하 폭을 보면 자국 산업 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저관세를 도입하는 반면, 자국 산업에 대한 충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산업 및 부문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뿐 아니라 높은 관세율 자체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가전제품, 자동차 등 주요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세율은 2008년까지도 20~30% 선으로 유지된다. 또 에틸렌 등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원자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관세 인

하를 실시하는 반면, ABS, PVC 등 중국 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며, 6% 이상의 관세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표 1, 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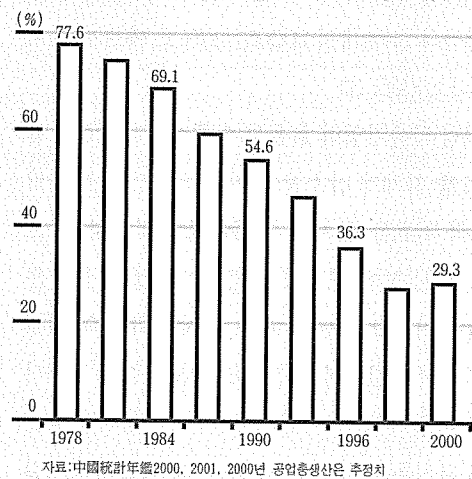
또 자본시장 개방에 있어서도 개별 은행, 보험사 등의 시장 참여는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자본계정의 개방(자본 이동과 관련된 인민폐의 자유태환)은 일단 2015년 이후의 일로 멀찌감치 미뤄두고 있다. 즉 동아시아 금융 위기의 한 원인이 된 단기적인 자본 이동에 의한 위기의 증폭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자본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참여를 기대하는 다국적 헤지펀드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겠지만, 중국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2년간 4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1년 468억 달러로 15%나 급증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에서 중국 WTO 가입의 영향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중국 국유기업의 수익성(이윤총액)



<그림 3> 중국 국유기업의 비중(국유기업 생산/공업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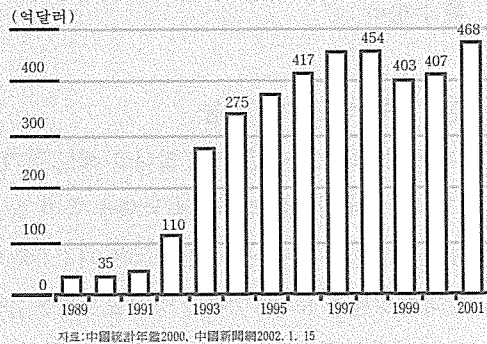


〈표1〉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에어컨	33.3	30.0	30.0	30.0	30.0	30.0	30.0	30.0
디지털 TV	39.0	36.0	33.0	30.0	30.0	30.0	30.0	30.0
LCD	12.0	8.0	4.0	0.0	0.0	0.0	0.0	0.0
에틸렌	3.5	2.8	2.0	2.0	2.0	2.0	2.0	2.0
PVC, ABS	13.9	12.3	11.3	10.7	9.7	8.6	7.6	6.5

자료: WTO, Draft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그림4〉 외국인 직접투자자의 변화



사회적 갈등이 체제 위기로 전환될 것인가? 개혁개방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 역시 당장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전환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사이의 지역격차는 서부대개발이라는 내륙지역 발전 정책을 계기로 향후 오히려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 문제 역시 대부분의 발전도상국이 경험하는 문제이다. 최근 그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농촌의 부흥을 통해서보다는 점진적인 도시화의 진전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때 '민공조(民工潮)' 혹은 '맹류(盲流)'라 불리며 불안요인으로 지목되었던 농촌 단신 노동자의 도시 유입은 풍부한 노동력 공급으로 임금 상승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중국의 경쟁력 유지에 공헌하고 있다. 또 오랫동안 도시와 농촌간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왔던 이튼바 호구(戶口) 제도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 등장하고 있고 지방 중소도시(小城鎮) 육성 정책도 시행되고 있어 중국의 도시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층간 격차 확대 문제 역시 한편으로는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계층을 육성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일종의 사회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먼저 부자되기(先富論)'야말로 중국 사회의 다이나미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자본가 계층의 성장에 따른 공산당의 입지 약화를 예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중국의 자본가들이야말로 개혁개방의 성과를 가장 많이 누려온 계층이며, 앞으로도 누구보다 경제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세력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산당과 대립하기보다는 공생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물론 만연하고 있는 당과 관료의 부패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매우 크다. 이에 따른 대중적 저항과 민주화 요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미 문화혁명이라는 극단적인 혼란을 경험한 중국의 지식인과 중층 세대는 대중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의 귀결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심지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노가 대규모로 조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점점 기득권을 잃고 있는 국유기업 노동자들의 저항이 조직될 가능성은 있다. 국유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개혁개방의 성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북 지역에서는 많은 시위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나간 시대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노력은 결코 여타 계층의 광범한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 상당 기간 확대될 것이지만 당분간 그것

이 체제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경기변동 폭도 조절 가능

체제 위기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해도 경기순환 과정에서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중국은 최소 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여야만 인여 노동력을 흡수하고 사회적 불만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는 평가도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경기침체라고 해도 그것이 누적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결합한다면 의외의 혼란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1980년대 중후반의 격심한 인플레이션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대표되는 사회적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해외 경제의 극심한 부침에도 불구하고 7%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그림5〉 참고).

이는 무엇보다 중국이 아직 국내에 풍부한 미개발된 잠재적 투자 기회를 갖고 있어서, 해외부문에서의 충격을 내수 진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해외 경기가

좋을 때는 수출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고 해외 경기가 침체한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국내 투자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그 충격을 상쇄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 고도성장이 유지되고 있는 1993년부터 2001년 사이에 국유부문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의 추이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이 기간 중 1997년을 제외하고는 수출 증가율과 국유부문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정확히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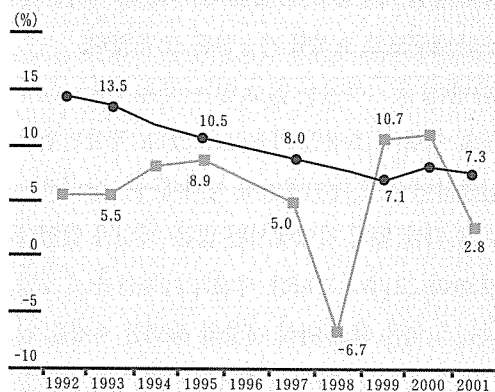
〈그림 5, 6〉

중단기적 위기 가능성 낮다

이처럼 최근의 이른바 ‘중국 위기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실제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즉 미시적 취약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거시적 위기로 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사회적 불안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이야기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또한 중국은 내수 부양과 수출 확대 사이의 적절한 선택을 통해 경기 순환 역시 비교적 효과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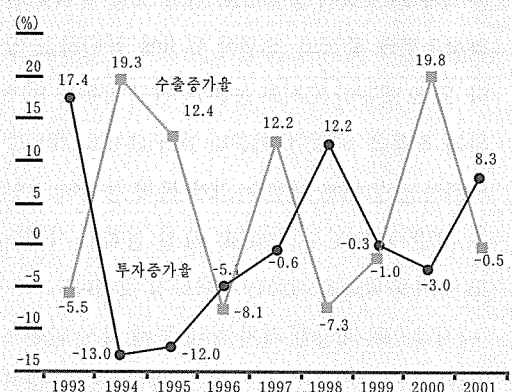
다만 국유기업 및 국유은행의 부실 해결, 국유기

〈그림5〉 중국의 경제성장률



자료 : 中國統計年鑑 2001, 2001년은 추경치

〈그림6〉 국유부문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



주 : 각기 실질 증가율에서 GDP성장률을 뺀 수치  
자료 : 中國統計年鑑 2001

업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재정투자를 통한 내수 확대 등이 모두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1990년대 들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국채 발행 잔액이 GDP의 15% 선에 미달하고 있어 큰 무리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주요 선진국의 50~100%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주의의 역사적 유산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지출과, GDP의 25% 이상이라고 평가되는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막대한 국채 발행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상장기업의 정부 지분 매각을 통해 사회보장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주식시장의 침체로 장벽에 부딪쳐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도성장에 따른 지하자원 및 수자원 고갈 문제도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석유의 수입의존도는 40%에 달할 전망이다. 북부 지역의 수자원 부족 문제도 심각해 중국 669개 도시 중 400개 도시가 상시적인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산당 중심의 정치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때, 새로운 정치 체제로의 이행을 얼마나 순조롭게 이루어낼 수 있느냐는 문제 역시 현재로서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이다. 다만 지금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한 체제의 붕괴로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재정 불안, 자원 고갈, 새로운 정치 시스템 등의 문제들은 상당히 장기적인 위기 요인들이다. 이들이 향후 단기간에 실제 위기로 전환

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뒤 2010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장기적인 문제이다. 그동안 중국 역시 이 문제들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50년을 목표로 한다는 최근의 서부대개발 정책 역시 장기적인 자원 고갈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 동태적 시각과 역발상이 필요

중국의 위기 요인을 평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동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사실 최근 중국의 미시적 취약점인 위기 요인이라고 지목되는 것들은 새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잔재들이다. 동태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재의 취약성들이야말로 향후 중국이 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중국의 위기가 우리 기업에게 어떤 의미인 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물론 중국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침체는 우리에게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좋은 사업 기회를 찾아왔듯이, 필요한 것은 차이나 리스크를 무작정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 위기를 거꾸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료제공: 주간경제 661호)